

4대은행 포용금융 확대… 저신용자 금리인하, 전체는 ‘글썸’

신용대출 금리 하락 금융채 영향
포용금융 확대 취약층 선별 인하
4대금융 5년간 70조 지원 약속
기준금리 동결 조달비용 부담 지속
고신용자 금리 상승격차 축소 전망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포용금융을 강화하면서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 확대는 특정 계층 또는 상품 범위에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고소득·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포용금융 확산으로 향후 취약차

주와 금융소외층의 고금리는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은행의 신용대출(금융채 6개월) 금리는 연3.81~5.21%로 집계됐다. 11월 말 신용대출 금리가 연3.83~5.31%인 것과 비교하면 하단기준 0.02%포인트(p), 상단기준 0.10%p 낮아진 수준이다. 하지만 은행 대출 전체 평균 금리는 완만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경기회복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 집값 상승 지속 등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가고 있어 대출금리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포용금융에 저신용자 금리 ‘뚝’

신용대출 금리가 소폭이나마 하락한 이유는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금융채 6개월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금융채(은행채 AAA) 금리를 보면

11월 말 2.878%였던 금리는 지난8일 기준 2.726%로 0.152%p 낮아졌다.

은행권이 포용금융을 강화하면서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금리를 낮춘 요인도 컸다. 앞서KB·신한·하나·우리 등 4대금융은 취약계층과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총 70조원 투입키로 약속했다.

신한은행 제주은행은 거래고객 중 두자리수 이상 금리를 부담하는 고객대출을 1년간 한 자리수로 인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긴급생활비 대출’을 출시한다. 대상은 금융소외계층(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으로 한도는 1000만원이다. 우리금융은 ‘긴급 생활비 대출’을 연 7% 이하의 금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권이 고금리 차주를 중심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컸던 취약차주와 금융소외계층의 이자 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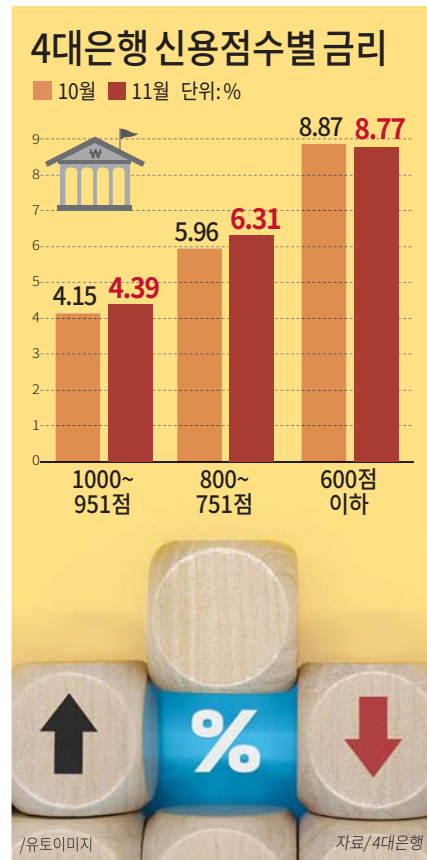
◆ 저신용자 내리고, 고신용자 오르고

다만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고소득·고신용자 대상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중 4대은행이 취급한 신용대출 금리는 고신용자(951~1000점) 기준 연 4.38%로 한달 전(연 4.15%)와 비교해 0.23%p 상승하고, 중신용자(751~800점)는 같은 0.35%p 올랐다. 반면 600점 이하 저신용자는 한달간 연8.87%에서 연8.77%로 0.10%p 하락했다.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진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포용금융의 확대로 600점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리를 낮출 계획”이라며 “상대적으로 저신용자의 금리가 낮아지면서(금리차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과잉공급 ‘죄수의 딜레마’… 주력산업, 민간 자율로는 한계”

산업연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보고서
석유화학·철강·배터리 과잉공급 장기화
“눈치보기로 감축 못해 자율조정 한계”
정부 주도 사업재편·신산업정책 제언

석유화학·철강·배터리 등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 구조조정 중심의 기존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형 신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은 기업 간 눈치보기로 누구도 먼저 나서기 어려운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라며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

조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석유화학·철강·배터리 산업이 생산능력은 지속 확대된 반면 가동률은 급락하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태에 장기간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규모 증설 등 외부 환경 변화는 이미 예견됐지만, 기업들은 “경기 회복 시 수요가 늘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대 설비 감축 대신 버티기 전략을 선택했고, 그 결과 선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다.

산업연은 기존 정부 대책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이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안을 가져오면 지원한다”는 ‘선(先) 민간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에 기반하면서, 과잉공급 국면을 타개하는 데 실효성이 제

한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 불확실성도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설비 감축이나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수익성 등 경쟁 민감 정보 교환이 불가피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이를 부담한 공동행위(담합)로 해석할 소지가 크다. 여기에 경쟁제한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장 획정 범위가 ‘내수’인지 ‘글로벌’인지 불명확해, 기업 입장에서 위법성 판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고서는 규제 패러다임을 기존의 ‘내수·가격 중심’에서 ‘글로벌 경쟁·경제안보’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향후 시장 확정과 경쟁제한성 심사

에서 단순한 가격 효과뿐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 ▲기간산업으로서의 전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과거 요소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급망 유지와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우선 정부 주도성 강화를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제시했다. 정부가 사후 승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조정 필요 산업과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참여를 권고하는 ‘능동적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나열식 지원을 산업·기업별 맞춤형으로 고도화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제도와

연계해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산업·지역 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신속 지원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공동행위 특례의 상시화, 관계부처 간 원스톱 공동심사 체계 구축, 경쟁제한성 판단 가이드라인의 명문화 및 사전 심사제 활성화를 통해 규제 예측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은 “정부 주도성을 강화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한편,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신속 지원 체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성능보다 ‘범정부 G2G 패키지’ 경쟁”

한-캐 방산협력 범정부 토론회
절충교역 넘어 범정부 통합모델 필요
에너지·자원·인프라 연계협력 확대

캐나다잠수함 사업(CPSP) 수주 성패는 성능 경쟁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G2G(정부 대 정부) 협력 패키지 제시 여부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산업·경제적 기여를 충족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 세미나에서는 CPSP 대응 전략으로 절충교역 활성화와 정부 주도의 통합 협력 모델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쟁국 독일과의 차별화 포인트는 무기 성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산업·에너지·자원 연계협력 패키지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

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공개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기준에 따르면 플랫폼 성능 비중은 20%에 불과한 반면,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이 50%, 산업기술혜택(ITB)·고용 창출·방산 공급망 통합 등 경제적 기여가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자로 나선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방산담당관)은 “이번 사업의 승부처는 성능이 아니라 캐나다의 ‘Buy Canadian(캐나다산 구매)’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전략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이 잠수함 제안에 에너지·핵심광물·배터리 산업을 연계한 G2G 패키지를 결합해 캐나다 산업정책과의 적합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한국도 이에 맞춰 에너지·핵심광물·우주 협력을 묶은 범정부 G2G 패키지를 제시해야 한다며, 캐나다 석유·천연가스의 단순 구매를 넘어 액화천연가스(LNG)·LPG 운송선 발주와 LNG 터미널 지분 투자 등 인프라 연계형 협력으로 확장하고 청정기술·해상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니켈·리튬·코발트·희토류 등 핵심광물 개발 참여와 제련·단조·주조 공장을 포함한 공급망 공동 구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캐나다 텔레스트 라이트스피드 제재도 위성통신 협력과 캐나다 노바스코샤 우주발사장 활

용 등 우주 분야 협력도 포함해, 북극·우주까지 확장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성능 격차는 크지 않다”며 “결국 국가 차원의 장기적 파트너십 설계 역량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근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현행 절충교역 대응 체계만으로는 CPSP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 안보실 주관 컨트롤타워(TF) 구성, 부처 간 협업 강화, 전문 지원기관 기능 보강을 주문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 사업은 기업 단독 경쟁이 아니라 정부·국회·산업계가 외교·안보·산업·금융·기술을 묶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하는 프로젝트”라며 범정부 지원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